

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어 있어.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을 :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았는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지. 기득권층 자녀는 부모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불평등은 재생산되는 것이지.

- ①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난이도] 下

갑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을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계층화 현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 ① (O)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의 결과로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 ② (X) 갑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 현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계층 현상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사회계층화 현상을 사회 문제로 여기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 ③ (X)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귀속적 요인에 의해 사회 계층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봅니다.
- ④ (X)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의 입장입니다.

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A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과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500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하였다.
- (나) 연구자 B는 도시빈민지역에 살았던 C할머니 가족의 빈곤문제를 연구하였다. 할머니의 손주들이 25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보기>

-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 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ㄷ. (나)는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한다.
-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일원론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난이도] 中

(가)는 실증적 연구방법, (나)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사례입니다.

ㄱ. (O) 실증적 연구방법은 수치화된 자료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치화하기 어려운 개념의 경우 이를 수치화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개인의 인식이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ㄴ. (O) 실증적 연구방법은 수치와 통계와 같은 양적자료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ㄷ. (X) 가설은 연구 주제에 관한 잠정적 결론입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입증할 자료를 찾는 방식의 연구는 실증적 연구방법입니다.

ㄹ. (X) 방법론적 일원론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특징입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정당보다 후보자의 됴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을 : 날아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떤 후보를 뽑느냐 보다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②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 [난이도] 下

갑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명목론적 관점, 을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실재론적 관점입니다.

- ① (O) 사회명목론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하여 개인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 ② (X)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사회=개인+개인)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입니다. 사회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사회>개인+개인)이라고 봅니다.
- ③ (O) 사회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④ (O) 사회 실재론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험에서 가끔 '사회는 개인에게 불가항력적인 존재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천 가구,%)

지역	연도	총 가구 수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 가구*	계
				(한)부모와 미혼 자녀	(한)부모와 기혼 자녀			
A	1990	5,000	6.6	70.1	0.4	7.7	15.2	100
	2010	10,000	11.8	54.5	0.7	4.3	28.7	100
B	1990	3,000	10.1	62.4	1.4	14.2	11.9	100
	2010	2,500	14.2	43.4	0.4	1.0	41.0	100

※ 기타 가구는 1인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등을 포함함.

-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정답] ④

[출제영역] 사회문화 자료분석 문제 [난이도] 上

- ① (X) 4세대 이상 가구도 확대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4세대 이상의 가구가 기타가구로 묶여서 정확히 비중을 산출해낼 수 없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로는 확대 가족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② (X) 핵가족은 ‘부부 가구’와 ‘(한)부모와 미혼 자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B지역의 1990년 핵가족 비율은 72.5%이고, 2010년 핵가족 비율은 57.6%입니다.
- ③ (X) 1990년의 경우 A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76.7%(부부가구 6.6%+(한)부모와 미혼 자녀 70.1%)로 절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1990년의 경우 A지역에서 확대 가족 수는 핵가족 수보다 적습니다.
- ④ (O) 1세대 핵가족이라는 것은 부부가구를 의미합니다. 2010년의 경우 A 지역의 부부가구 비율은 11.8%이고, B지역의 부부가구 비율은 14.2%로 A지역 핵가족 비율이 B지역 핵가족 비율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A지역의 경우 10000가구 중 11.8%이기 때문에 1180개구가 핵가족인데 비해, B지역의 경우 2,500가구 중 14.2%로 355개구가 핵가족입니다. 따라서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례		이론
A는 출소 후에도 전과자란 꼬리표로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가)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B는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시험 문제를 빼돌리다 적발되었다.	⇒	(나)

<보기>	
ㄱ.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가)는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찾는다.	
ㄷ.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난이도] 中

(가)는 낙인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입니다.

ㄱ. (O)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ㄴ. (X)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규정에서 찾습니다.

ㄷ. (O) 머튼은 일탈의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찾습니다. 제시문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문화적 목표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컨닝이라는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ㄹ. (X) 낙인이론은 미시적 관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의 한 종류입니다.

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 ① 주민소송
- ② 사법상 손해배상
- ③ 행정상 손실보상
-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정답] ③

[출제영역] 행정구제제도 [난이도] 下

- ① (X)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납세자가 제기할 수 있는 공익소송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 소송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X) 사법상 손해배상은 사인(私人)간에 발생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O)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도로를 넓히는 공익을 위해 갑의 집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갑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f) 수용(收用)이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또는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④ (X)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은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제시문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사례이구요.

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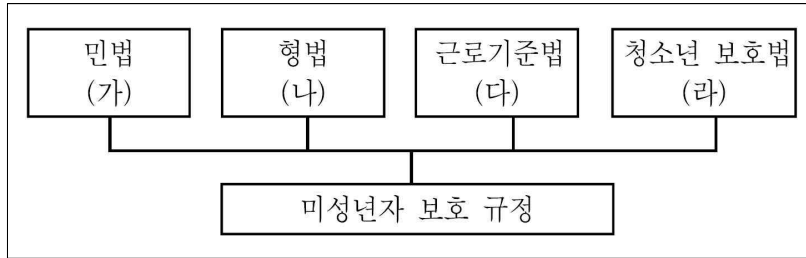
[출제영역] 국제법의 종류와 효력 [난이도] 中

- ① (O) 우리 헌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X) 헌법재판소는 1991년 7월 22일 선고 89헌가106 결정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③ (O) 우리 헌법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헌법전문,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제1항,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무를 부여한 헌법 제69조 등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O)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략적 전쟁이란 영토의 확장이나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전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나) - 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③ (다) - 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라) - 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난이도] 中

① (O) (가) - 만 18세는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를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O) (나) - 만 13세의 중학생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그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O) (다) -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임금착취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 청구는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라) - 만 19세의 대학생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제조물 책임법 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제조물책임법 [난이도] 中

- ① (O) 제조물책임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입니다.
- ② (O) 제조물책임법 2조 2호에서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을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X)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결함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O)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제조물책임법 제4조 (면책사유)

-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문 0000년 00월 00일

○○법원은 갑이 “A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에는 인격·신분·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 중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인격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이 사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다.

-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정답] ①

[출제영역] 알 권리 [난이도] 上

- ① (X)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고 하여 헌법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 ② (O) 기본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할 수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것을 기본권 침해라고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종입니다. 이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서든, 개인에 의해서든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③ (O)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O)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순으로 3심제가 적용됩니다.

11.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1688년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다)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앵레짐(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보기>

- ㄱ.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ㄴ.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ㄷ.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출제영역] 민주정치의 발전 [난이도] 中

(가)는 영국의 명예혁명, (나)는 미국 독립혁명, (다)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ㄱ. (X) 권리청원은 의회가 찰스1세에게 제출한 문서로서 청교도 혁명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잠깐 공화정이 실시되고, 왕정복고가 되었으나 제임스 2세가 전횡을 저지르자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일으킨 것이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나온 문서는 권리장전입니다.

ㄴ. (X) 미국의 독립혁명은 천부인권(자연권)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실현한 것이 바로 독립혁명인 것입니다.

ㄷ. (O) 미국은 독립혁명결과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하게 됩니다.

ㄹ. (O)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1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 ① 주민 발안제
- ② 국민 발안제
-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정답] ①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난이도] 下

① (O)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선거권자는 만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항목(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 발안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 ③ (X) ④ (X) 국민 발안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들입니다.

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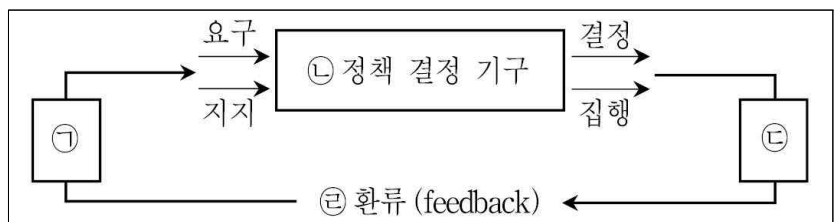
[출제영역] 정부형태의 변천과정 [난이도] 中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개정	정부형태	대통령선출	대통령임기
건국헌법(1948.7.17)	대통령제	정.부통령 국회간선	4년 1차중임
1차 개헌(1952.7.7)	대통령제	정.부통령 직선제	4년 1차중임
2차 개헌(1954.11.29)	대통령제	정.부통령 직선제	초대대통령 중임제한철폐
3차 개헌(1960.6.15)	내각책임제	간선(양원합동)	5년
4차 개헌(1960.11.29)	내각책임제	간선(양원합동)	5년
5차 개헌(1962.12.26)	대통령제	직선	4년
6차 개헌(1969.10.21)	대통령제	직선	4년 3기
7차 개헌(1972.12.17)	대통령 권한 강화	간선(통일주체국민회의)	6년(중임규정폐지)
8차 개헌(1980.10.27)	대통령제	간선(대통령선거인단)	7년(단임)
9차 개헌(1987.10.29)	대통령 권한 축소	직선	5년(단임)

- ① (X) 1952년 1차 개헌은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변화를 내용으로 합니다.
- ② (O) 쿠데타를 통해 제2공화국을 붕괴시킨 군부세력은 1962년 5차 개헌을 통하여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 ③ (X)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중임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3선까지 허용한 것은 1969년도에 있었던 6차 개헌입니다.
- ④ (X)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채택되었습니다.

1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ㄹ. ㉠과 ㉣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출제영역] 정책결정과정 [난이도] 中

㉠은 투입, ㉢은 산출과정입니다.

ㄱ. (O) 우리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은 입법 분야의 청원권 실현제도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ㄴ. (O) 사회의 전문화·세분화와 복지의 강화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기구 중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를 행정국가화현상이라고 합니다.

ㄷ. (X) ㉢은 산출과정입니다. 산출과정에서는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공식적 정책결정참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정책결정참여자로서 투입이나 환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ㄹ. (X)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과 환류가 활발한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입니다.

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선거제도 [난이도]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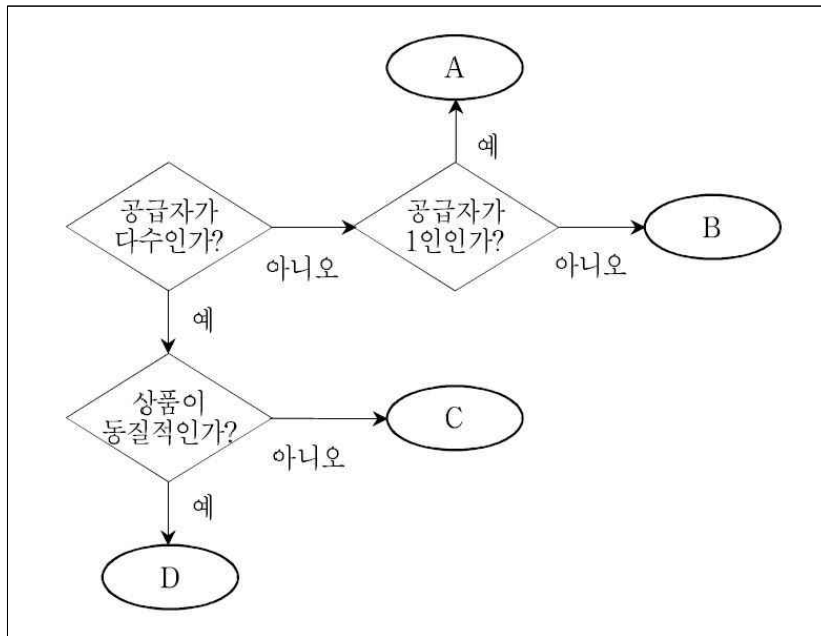
① (X)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기피합니다. 이를 사표방지심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A라는 유권자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 공천 받은 갑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확인된 갑 후보의 지지율이 3%남짓입니다. 이렇게 되면 1명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하에서 당선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은 을 후보는 지지율이 45%, 민주당에서 공천 받은 병 후보도 지지율이 45%라고 했을 때 유권자 A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갑 후보에게 투표해봤자 사표가 될 것이 뻔하니까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성향의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표를 못 받은 거니까 1차적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손해라는 것이 지역구 투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정당별로 자신들이 공천한 지역구 후보가 받은 표를 정당득표율로 간주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는 1인 1표제 하에서는 사표방지심리 때문에 지역구에서 1표를 손해 볼 뿐만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도 1표를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한다면 유권자 A는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게 1표를 던질 것이고, 정당 투표에서는 평소 자신이 선호하던 정의당에 1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1인 1표제보다 1인 2표제가 군소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② (X) 1인 1표제와 1인 2표제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습니다.

③ (O) 별도의 정당투표가 없는 1인 1표제 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1인 2표제의 경우 별도의 정당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에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X)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별도의 정당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이 완벽히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

[출제영역] 시장의 종류 [난이도] 中

공급자가 1인인 A는 독점시장, 소수인 B는 과점시장, 공급자가 다수인데 이질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C는 독점적 경쟁시장, 공급자가 다수인데 동질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D는 완전경쟁시장입니다.

- ① (X) 담합이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카르텔은 기업연합이라고도 하며,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 산업부문의 독립기업을 독점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업연합형태를 말합니다. 담합이나 카르텔은 과점 시장의 특징입니다.
- ② (X)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독점시장입니다.
- ③ (O)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 ④ (X)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공급자와 수요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격의 순응자입니다.

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00	190	180	170	160	150
공급량(개)	140	160	180	200	220	240

-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정답] ④

[출제영역] 수요와 공급 [난이도] 上

- ① (X)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하게 되고, 이때 균형 거래량은 180개입니다.
- ② (X)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240개가 돼야 합니다. 주어진 표에서는 수요량이 240개인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X)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인 X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 ④ (O)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정확히 세금 부과액만큼 수직으로 상승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공급량이 140개 일 때 가격이 600원이었으면 이제는 1,200원이 되고, 공급량이 160개일 때 가격이 800원이었으면 이제는 1,400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00	190	180	170	160	150
세전 공급량	140	160	180	200	220	240
세후 공급량	X	X	X	140	160	18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새로운 균형점은 가격 1,400원에 거래량 160개입니다. 세금 부과 전에는 균형 거래량이 180개였는데, 세금 부과 후에는 160개가 되었으니 균형거래량은 20개가 감소한 것입니다.

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A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9.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4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① 8.1% ② 7.1% ③ 6.1% ④ 5.1%

[정답] ②

[출제영역] 기획비용과 수익률 계산 [난이도] 中

합리적인 선택이란 수입이 비용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B프로젝트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지불하게 되는 명시적 비용은 부족한 돈 200만 원을 연 5.0%로 빌리는데 필요한 10만원의 이자입니다. 암묵적 비용은 A프로젝트를 선택했을 때 소요되는 200만원에 대한 9%의 수익률인 18만 원입니다. 이 비용을 합치면 28만 원입니다. 400만원을 투자해서 2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7%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B프로젝트 연간예상 수익률의 최저수준은 7.1%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기본서와 필기노트에 숫자만 바뀌서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다고 하지만, 제 기본서와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문제 정답이 7%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답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강사 입장에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초대형호재입니다. 저도 사실 이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해 본적 없습니다. 워낙 많은 교재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우연찮게 하나 얻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중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대신 저는 이 문제를 통해 출제성향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나름 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지한 것이 맞다면 앞으로 제가 주는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시험장에서 낚이는 문제 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1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구 분	A국	B국	C국
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4.5	6.2	-2.3
인구증가율(% , 전년대비)	5.2	4.5	3.3
물가상승률(% , 전년대비)	5.0	5.2	10.4
실업률(%)	3.6	4.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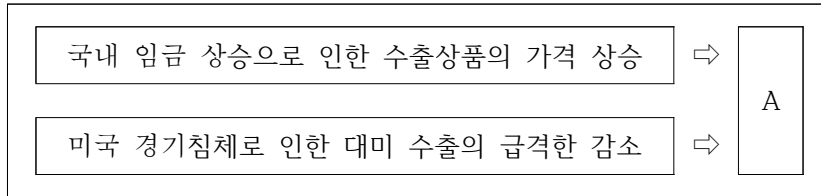
- ①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정답] ④

[출제영역] 경제 지표 해석 [난이도] 中

- ① (X) 실업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률만으로 실업자 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② (X) 명목 GDP의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값입니다.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은 A국 9.5%(4.5%+5.0%), B국 11.4%(6.2%+5.2%), C국 8.1%(10.4%-2.3%)로 B국이 가장 높습니다.
- ③ (X)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실질 GDP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만으로 실질GDP의 증가액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④ (O)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로 나눈 값($\frac{\text{실질 GDP}}{\text{인구}}$)입니다. 제시된 표에 따르면 A국과 C국은 분자인 실질GDP보다 분모인 인구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 B국의 경우 실질GDP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한 것입니다.

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정답] ③

[출제영역] 환율 변동 [난이도] 中

수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하여 달러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달러의 공급이 부족하여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①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국내 기업이 1달러 짜리 원자재를 수입해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②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갚아야 할 외채도 딱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③ (O)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같은 1달러를 보내려고 해도 과거에 비해 500원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 ④ (X)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10,000달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이 사람이 원화로 환전했을 때 임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1달러당 1,500원이 된다면 10,000만 달러를 환전했을 때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